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청정海 부산

BUSAN URBAN PLANNING MAGAZINE

2020 April

부산도시계획 아고라
www.busan.go.kr/build/agora

BUSAN U²

vol. 27

부산도시계획정보지

부산 유 스케어(Busan U²:Busan U Square)는 부산도시계획정보지의 별칭으로 부산의 도시계획(Urban Planning)과 부산에 사는 당신(you:U)이 만나는 광장이며, 접합점(X)을 표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20. 4 (통권 27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부산도시계획정보지

BUSAN URBAN PLANNING MAGAZINE

2020 April
vol.27

CONTENTS

03
해외도시 트렌드
뉴욕시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06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09
특집
제5차 국토종합계획

12
정책동향 I
규제자유특구

16
정책동향 II
스마트챌린지 사업

20
알기쉬운 도시계획
토지은행(Landbank)제도

22
법령 제·개정 소식

2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뉴욕시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해외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뉴욕시(City of New York) 도시개발 동향

인구 약 87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적인 대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는 미국 허드슨 강 어귀에 자리잡은 항구도시이다. 뉴욕 증시, 뉴요커 등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화 시대에 조성된 도시로서 열악한 노후 도심에 대한 재생 및 재정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뉴욕시는 1960년대와 70년대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공공 주도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였으나, 철거형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 재정을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하여 정책적으로 더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뉴욕시는 다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해 용도 변경과 민간 자본을 활용한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Hudson Yards Projects)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뉴욕시(City of New York)와 뉴욕주(State of New York), 뉴욕 광역교통기관(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이 맨해튼(Manhattan)의 허드슨 강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의미한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10.5ha의 철도 차량기지에 대한 복합 재개발과 뉴욕 지하철 7호선 연장, 자비츠 컨벤션 센터(Javits Convention Center) 리노베이션 등이 포함되었으며, 뉴욕시가 공원,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30억 달러와 민간 자본 150억 달러 규모가 투자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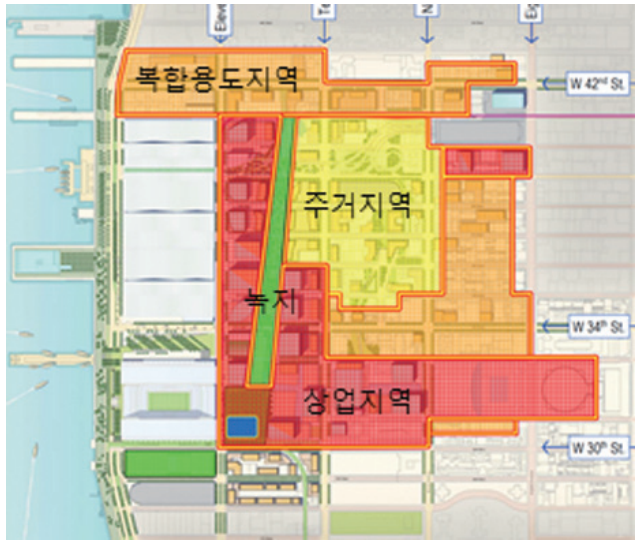
원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2005년 뉴욕시가 '2012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실패함에 따라 뉴욕 광역교통기관 소유의 프로미식축구팀을 위한 스타디움 건설계획을 취소하면서 새롭게 제시한 뉴욕 서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뉴욕시는 철도 차량기지 일대의 용도지역(공업지역 ⇒ 상업지역, 주거지역) 변경계획안을 뉴욕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뉴욕 시의회는 2009년 12월 이를 승인했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가 준공되면, 철도 차량기지는 인공 대지로 덮히고, 그 위에 2.2ha의 녹지공간이 조성되며, 업무시설, 중·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 4,000호를 포함한 13,500호의 신규 주택, 상업시설, 자비츠 컨벤션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호텔시설이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허드슨 야드 일대는 활기가 넘치는 대중교통기반형 복합용도 공간으로 조성되어 총 2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000명의 경제활동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상업지구로 탈바꿈될 것이다.

물론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므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일부 계획을 수정하고 새롭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12년 12월 착공되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 차량기지에 대해 99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공중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준공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될 예정이다.



〈허드슨 야드 개발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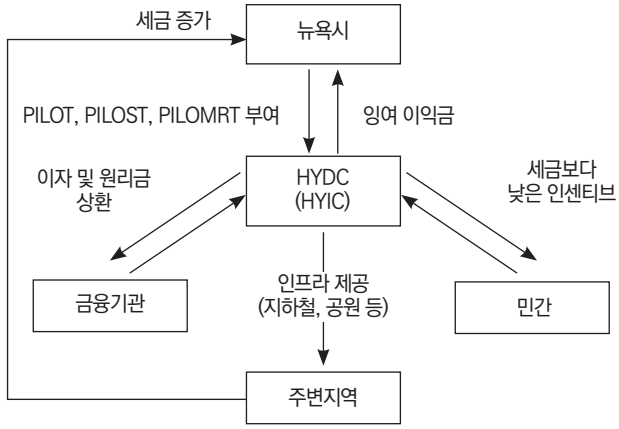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토지이용계획〉

●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 추진 구조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뉴욕시와 뉴욕주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여 설립한 허드슨 야드 기반시설 개발공사(HYIC : Hudson Yards Infrastructure Corporation)와 프로젝트의 예산, 자금 조달 등을 관리하는 허드슨 야드 개발공사(HYDC : Hudson Yards Development Corporation)가 주도하여 사업을 관리한 공공주도형 개발 프로젝트이다. 개발공사는 뉴욕주 비영리기관법(Not-for-Profit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New York)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토지수용권을 가지며, 주정부의 채무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단위의 별도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개발공사는 재산세 감면(PILOT : Payment in Lieu of Taxes)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상업시설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세금보다 낮은 약정 비용(payment)을 지불받아 조달한 자금을 공원 조성이나 학교 설치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 재산세 감면 제도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뉴욕시는 실제 대형 은행 본사 이전과 같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최소 500개 이상)과 대규모 자본 투자 및 신규 오피스 공급을 위해 재산세 감면과 판매세 감면(PILOST : Payment in Lieu of Sales Taxes), 모기지 등록세 감면(PILOMRT : Payment in Lieu of Mortgage Recording Taxes)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허드슨 야드 개발에서도 세제 인센티브가 재원 조달에 큰 기여를 하였다.

개발공사는 조성한 공공 토지를 매매하지 않고 장기 임대를 통해 임대료 수익을 추구하고, 임대주택 세제 지원, 공공 소유의 철도 부지 사용권 및 개발권 판매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개발공사는 관련 부지 매입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이익금은 뉴욕시에 상환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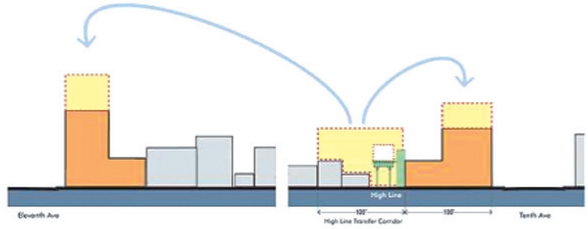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 추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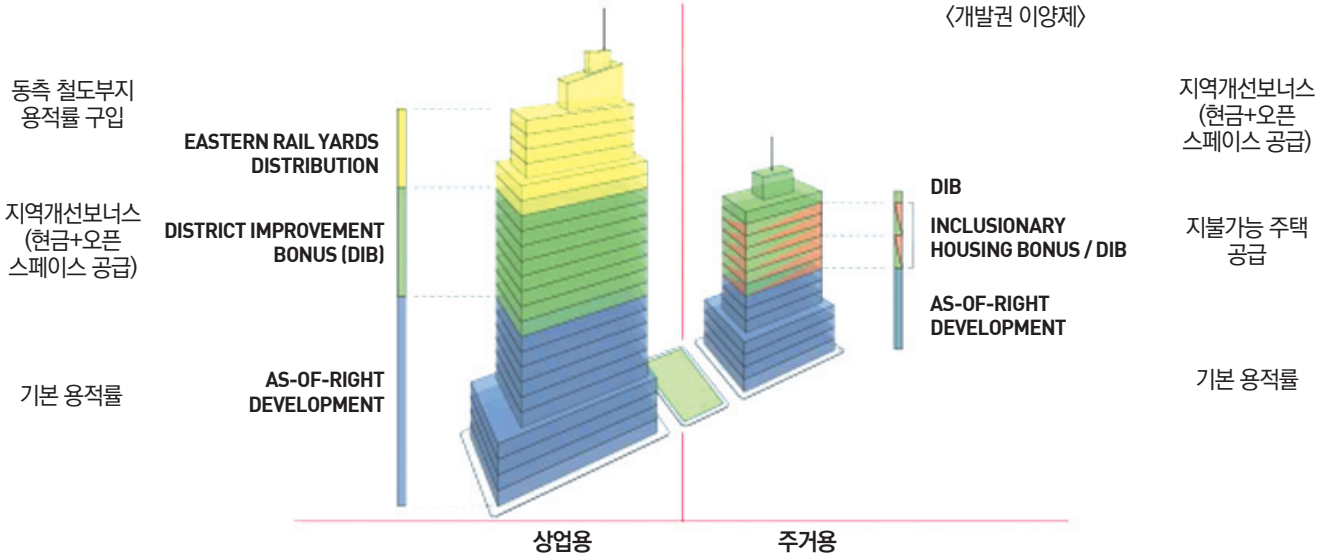
● 개발권 이양제와 지역개선보너스 용적률 인센티브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지역적 특징과 사업의 성격에 맞는 유연한 용도지역제 운용을 위해 개발권 이양제(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와 지역개선보너스 용적률 인센티브(DIB : District Improvement Bonus)를 활용하였다. 상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개발권 이양제는 허드슨 야드 내 녹지 및 개방공간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공중권을 거래하여 상업용 시설의 용적률을 높힐 수 있게 한다.

지역개선보너스 용적률은 공공에 현금을 기부하거나 녹지 등을 조성하여 제공할 경우 용적률 확보가 가능한 제도이다. 현금으로 기부된 자금은 허드슨 야드 내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사용되며, 제공된 녹지는 원가법에 기반하여 가격을 평가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 용적률을 결정한다.



〈개발권 이양제〉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허드슨 야드 내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기본용적률은 1000~1900%이나,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최대용적률은 1000~3300%까지 건축가능하다. 반면, 주거용 건축물은 기본용적률 600~750%이며, 중·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을 전체 건축물의 15~30%까지 공급할 경우 최대용적률은 1500%까지 건축가능하다.

●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의 건축물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쇠퇴한 철도 차량기지를 타워형 고층 건축물에 주거시설, 업무시설, 호텔, 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0.1%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초고급 주거와 비싼 명품 쇼핑몰을 갖춘 대형 오피스 공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허드슨 야드 내 베슬(The Vessel)과 셰드(The Shed)에 대해서만은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1차 준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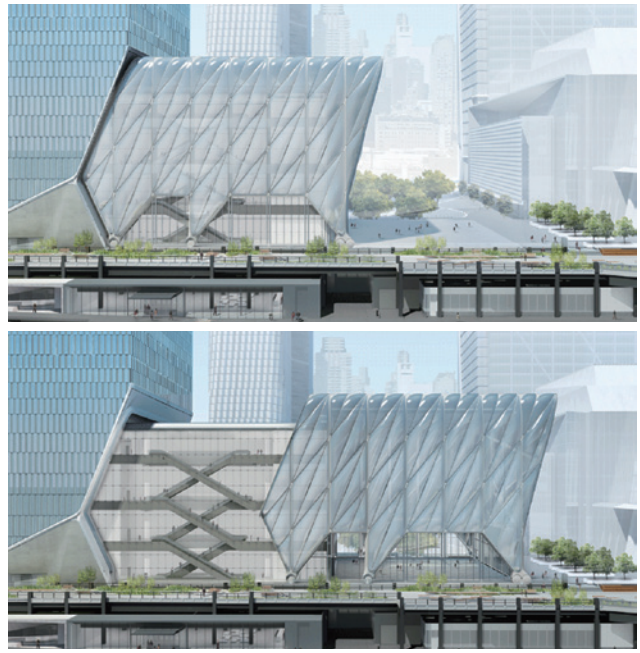
벌집 모양을 연상케 하는 베슬은 2019년 3월 오픈되었지만, 맨해튼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관광명소로 부상하였다. 영국 출신 건축가 토마스 헤더위크(Thomas Heatherwick)가 설계한 베슬은 16층 구조에 높이 46m인 전망대로 총 2,500개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1년 내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하는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하는 베슬은 구리 소재로 만든 구조가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정글짐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맨해튼과 허드슨 강, 강 건너 뉴저지(New Jersey)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조망할 수 있는 베슬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무료 입장이지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허드슨 야드 남쪽 끝에 위치한 셰드는 공연·전시를 위한 아트센터이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추진한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Rubens Bloombeg) 전 뉴욕시장의 이름을 딴 블룸버그 빌딩에 박스형으로 돌출한 8층짜리 아트센터는 접었다 펼 수 있고, 이동가능한 철골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일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철골 구조물은 8층 짜리 건물을 감싸고 있다가 이동하면 노출되어 있던 야외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바꾸게 된다. 약 36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은 벽면에 반투명 폴리머가 설치되어 있으며 레일을 타고 움직인다. 2019년 5월 개장한 이 아트센터는 허드슨 야드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보면 부산의 철도 재배치 계획에 대한 향후 개발 방향을 보여 주는 듯하다. 오래된 철도 차량기지에 대한 재개발 프로젝트로서 대규모의 녹지공간 조성과 고층 건축물을 지지하기 위한 플랫폼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이 보인다. 물론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역시 완성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쇠퇴한 도심 공간에 대한 재생사업에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단순한 주거·상업공간 조성이 아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시설과 충분한 녹지 공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베슬을 밖에서 봤을 때(좌), 안에서(우) 봤을 때 모습〉



〈셰드를 접었을 때(위)와 펼쳤을 때(아래) 모습〉

참고자료

이승우·허윤경, 2014, "뉴욕시 도시재생사업 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건설사업연구원.

www1.nyc.gov/assets/planning/download/pdf/plans/hudson-yards/hyards.pdf1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확실한 변화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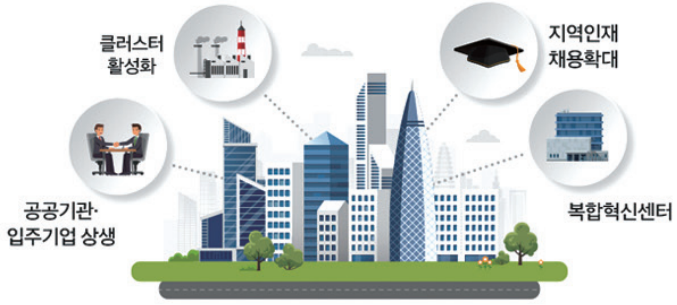
활력 넘치는 경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목표1 지역경제거점 조성

전략 ❶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

혁신도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 진흥지구

행복도시·제주



행복도시 바이오헬스 플랫폼



제주 의료서비스 센터

전략 ❷ 쇠퇴지역을 경제혁신 거점으로 재생



LH 등 공공주도	고밀복합 개발,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장비,
주거 · 상업 · 산업기능 융복합 경제거점	산업단지 경제생활권 재생	도심 노후공업지역 복합 개발

전략 ❸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을 집중 육성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 역세권 개발사업

규제완화
세제지원
금융지원



인바운드 시범공항

항공 · 관광 융복합

청주·무안·양양 등 3개 지방공항



수소도시·스마트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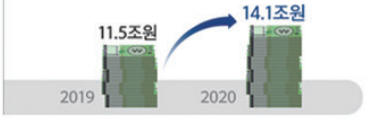
청정연료 기반도시
첨단기술 도시

(수소)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3곳
(스마트) 세종,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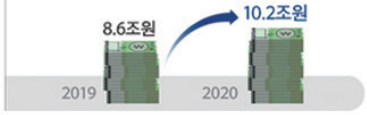
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

전략 4 ···· 대규모 핵심 SOC 중심 투자 확대

교통 SOC
- GTX 등 대도시 광역철도망 건설
- 광역·지역 도로망 구축
- 공항 확장·신공항 건설



생활·노후 SOC
- 생활인프라 공급
  -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 철도시설·교량·터널 정비



민자사업
- 적격성 조사 완료 후 조기착공 추진(5개사업, 4.9조원)
- 신규제안사업 조속 검토(10.4 조원)



전략 5 ····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15개 사업 21.7조원 투자
총사업비 기준, ~'29년

철도
동해선 전철화 사업
총 사업비 4,875억원

도로
국도 20호선(신안-생비량)
총 사업비 1,793억원

행정절차 간소화
턴키방식, 설계통합 등

+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목표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2만개]

전략 6 ····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

건설산업



- 전자적 대금 지불시스템 안착
- 적정임금제 전면 도입
- 건설산업 구조개편(업역폐지)

교통산업



- 택시 월급제 시행
- 버스 주 52시간 정착
- 안전운임제 시행

항공산업



- MRO산업 경쟁력 강화
- 항공기 · 부품산업 육성
- 항공 조종사 선 선발 후 교육

전략 7 ···· 글로벌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신북방·신남방 협력 성과 구체화	해외 투자개발사업 경쟁력 확보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활성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	1.5조원 규모 PIS펀드 본격 운용	범정부 수주지원체계 'Team Korea'
연해주 산단	방글라데시·파라과이 등 수주	인도네시아 新수도 이전 지원
미얀마 경협산단 개발 협력	KIND 해외 역량 강화	해외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5개)

전략 8 ···· 혁신성장 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



사업화 R&D
연 5천억원

사업화 펀드 조성
16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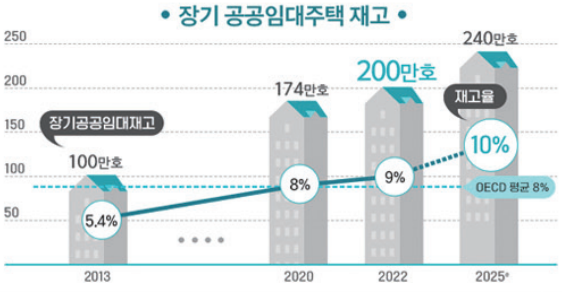
확실한 변화 02 >>>

편안한 일상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생현안1 서민 주거안정 강화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 개막





'20년 공적주택 21만호 공급

'25년 OECD 10위권 진입
공공임대재고율 10% 달성 추진

취약계층 주거 종합 지원
전수조사 실시 · 발굴

지역에서 환영받는 임대주택 확산

문화·예술연계 행복주택 (웹툰·극단)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	커뮤니티케어 주택



투기억제·공급 확대



주택보유의 사회적 책임강화
- 낮은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



불법행위·이상거래 상시조사
- 불법행위 대응반 발족
- 국토부 직권수사



주택 공급 확대
- 수도권 30만호 공급 조기화
- 서울 내 주택공급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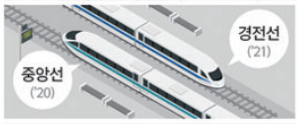


민생현안2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

전국 주요 거점 30분대 급행철도망 구축



대심도 GTX-A·B·C, 신안산선 등 신속 추진



준고속열차 (EMU, 260km/h) 도입



400km/h급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

철도 연계 교통체계 강화



대중교통 연계 체계

버스, 택시,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연계



서울역,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강북지역의 경제 거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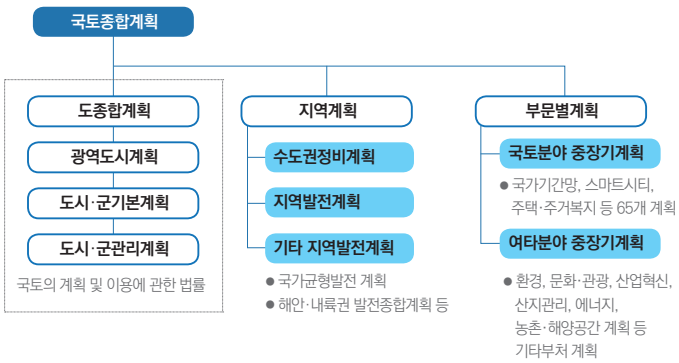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 업무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이란?

●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 계획의 비전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어디에 살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누리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지역의 다양성·자율성을 기반으로 균형있는 국토 조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국토의 회복력 제고를 통해 품격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로 전환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 지능화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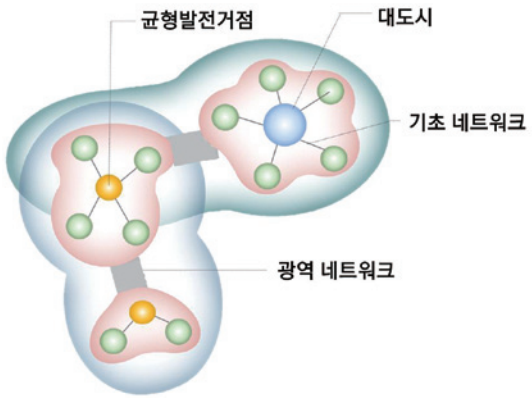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6대 추진전략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교통, 행정 등에 대해 지역 간 협력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반을 확보
- 기존산업 개선,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마련, 교통인프라·정주여건 등 지원기반 개선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수도권은 지방과의 상생발전, 교통·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내 균형발전, 질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방대도시권은 인근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중추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 간 광역·순환형 인프라 구축
- 중소도시권은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등 균형발전거점을 속도감있게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소도시 연계형 도시권 육성
- 농산어촌은 생활서비스 집약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매력 제고로 유입·체류 인구 정착을 확대하고, 낙후·위기지역 지원 내실화



〈지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생태계 회복력 제고
- 기존산업 혁신과 미래 신산업을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성장 공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산업공간 조성·확산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추진

● 매력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쇠퇴관광지·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활력 거점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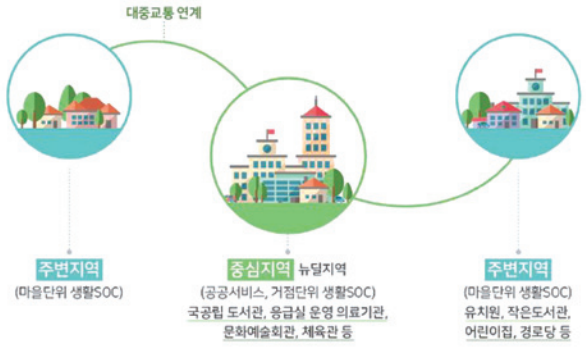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도심내 복합개발, 난개발 방지 등 도시의 적정개발과 관리,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추진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사회통합형 생활공간을 조성, 보육·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의 질적 확충,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

●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적정주거기준 검토 등을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 미래형 주거서비스 확대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 재난대응 범위를 확장하여 전 주기 방재체계 구축, 지역별 통합대응체계 구축, 지능형 국토방재기반 조성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특화모델 예시〉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건축물·교통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 유도 등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 조성
- 국토생태축 보전·복구, 도시내 녹색인프라 확충 등 국토환경 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오염·방치공간 재생 추진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수자원, 해양자원, 산지자원, 에너지자원 등 국토자원 특성을 고려한 미래가치 창출 및 활용도 제고

● 매력 있는 국토·도시 경관 창출
- 국토 경관 및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관품격 제고, 도시 전체 통합적 관점의 경관관리 추진, 일상생활 경관 향상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국가 간선망의 효율화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GTX 등 주요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 자율주행차와 개인용 이동수단, 하이퍼루프 등에 대비한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 검토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생애주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후 인프라의 적기 개량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고도화
- 어린이·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교통 이용플랫폼의 통합(MaaS13)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

● 지능형 국토·도시공간 조성
-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등 성장단계별·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공간 조성
- 토지·지하공간·교통 등 국토정보 통합을 통한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과 블록체인 도입 등 국토정보 보안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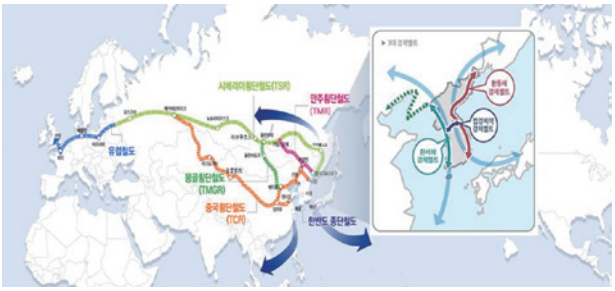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구현 및 지능화된 공간 활용 연계 구상〉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 협력
-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로 발전
- 비무장지대(DMZ)에 유엔기구, 생태기구 유치 등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설립하고 TCR, TMGR, TSR 등과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륙연결형 교통망 구축
- 신북방·신남방 정책, 도시개발모델 수출 등 교류·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제고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구상〉

부산광역시 발전방향

■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 및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 신남방·북방 경제권의 글로벌 브릿지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신북방·신남방정책 거점 연결 게이트웨이로서 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물류 중심기지 구축과 국제교류 관문기능 강화
  - 유라시아의 중심 거점기능 강화와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산업물류 및 관광자원의 연계 강화
  -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건설 검토, 동남권 환상형 내륙순환도로 구축, 남해고속도로~동해안고속도로(사상~해운대) 연계 고속 교통망 정비 검토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영상 산업의 거점 육성

- 신항만 중심 포트 비즈니스(Port Business) 육성
  -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의 허브항만으로 육성, 국제물류지원단지,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 배후물류단지 확충
- 부산을 동북아 선도 금융중심지로 육성
  - 해양산업 기반 금융특화 전략으로 해운·항만·물류·수산산업의 역량 강화
- 영상·컨벤션 산업의 중심기능 제고
  -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영상후반 작업기지 구축 및 첨단영상·정보통신기술 부품산업 육성으로 영상·정보통신(IT) 산업클러스터 조성

■ 환태평양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역별 기능 특화를 통한 다핵연계형 발전거점 육성
  - 부산대도시권(물류·금융), 울산대도시권(자동차·조선), 진해만환상도시권(로봇·기계), 내륙성장도시권(나노·의료), 사천만환상도시권(항공우주), 서북부성장촉진권(녹색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강화
- 동남권 선도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송기계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가기간산업의 거점 역할을 위해 동남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검토
  - 부산(항만, 조선기자재), 울산(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창원(기계, 해양플랜트, 로봇), 사천·진주(항공), 거제(조선) 등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검토
- 북항 통합개발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철도시설 재배치로 도심공간구조 개편
  - 경부선(구포~사상~부산진) 지하화 및 부산지역 철도시설(부산역, 가야조차장, 부산철도 차량정비단) 기능 개편 방안 검토

■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 및 기반 마련

- 주력산업 스마트·저탄소 시스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녹색기술 산업 유치
  - 산업·교통(물류)·주택 등 도시 전 분야에 저탄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단지 조성
- 문현혁신지구 중심으로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검토
  - 문현(금융, 핀테크), 영도(해양 R&D), 센텀2지구(4차 산업, 첨단 ICT 융복합산업) 등 3개 거점에 특화밸리를 조성하여 창업·혁신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및 국제교류·관광 기능 강화

-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
  - 생태공원 조성, 상·하수도 서비스품질 향상,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체계적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추진
- 취수원 다변화 및 낙동강 하굿둑 개방
  -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남강댐·합천댐 하류 활용 및 담수화 클러스터 조성과 물산업 육성
- 문화·관광 콘텐츠화 및 특화로 역사, 문화, 생태가 있는 국제관광거점 육성
  - 탐조, 습지, 섬, 산악 등 생태체험형 관광자원 및 국제적 관광네트워크 구축

■ 다 함께 살고 싶은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탈원전 시범도시 및 원전해체산업 거점도시 육성
- 생활SOC 확충 및 제도적 기반 정비로 격차 완화
-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주거사다리 구축, 주거복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광역거버넌스 및 분권형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 광역 거버넌스기구 설치를 통한 지역 간 협력시스템 구축
  - 동남권 특화산업 발굴·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동 추진
- 초국경 광역경제권 클러스터 구축으로 동북아 핵심경제권으로 도약
  - 동북아 통합경제체제의 새로운 상생 발전모델 제시
- 시민이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한 소통, 참여, 분권형 도시관리 기반 마련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도시균형 발전 도모와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19,「제5차 국토종합계획」

규제자유특구

최신의 도시정책 및 이슈 등을 소개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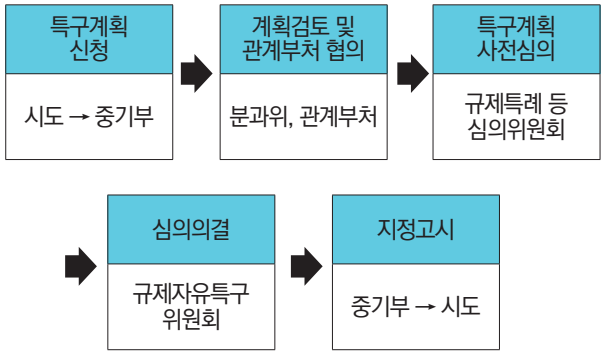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지역주력산업의 침체로 혁신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신산업·신시장 창출,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규제애로(74.6%), 우수인력 확보 애로(71.3%), 기술력 부족(55.9%) 등이 국내 신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시 느끼는 주요 걸림돌로 제시되었다. 규제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을 경험한 분야는 핀테크(70.5%),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산업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산업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입법방식 전환(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과 혁신제도 도입(규제샌드박스의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출시 전의 실증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광역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의 한 유형으로서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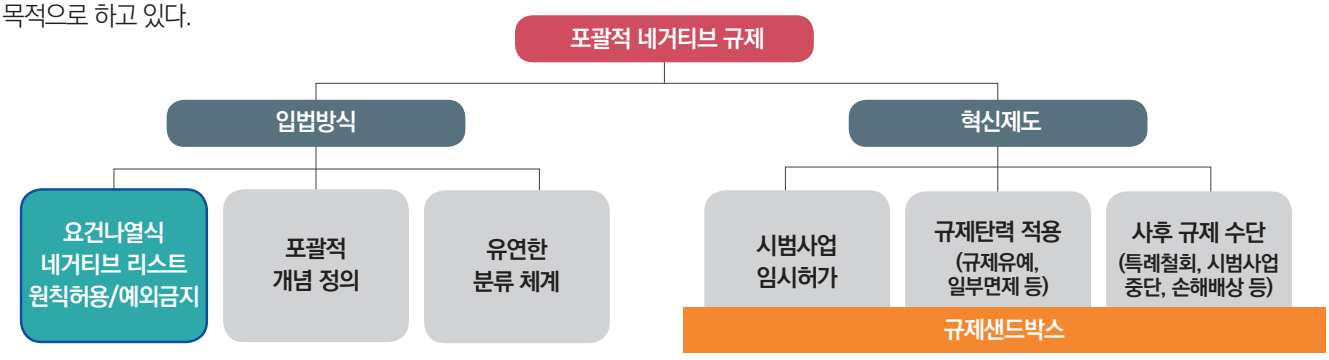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에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지역산업과 연계효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

규제자유특구의 핵심 내용은 규제샌드박스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줌으로써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는 시험·검증을, 임시허가는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들은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서 개발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관련부처에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관련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 진행이 가능하다.



〈신산업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내용〉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의 특징을 타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등)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이 신청하고 재정·세제지원이 없지만,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자체(시도)가 신청하고 재정·세제 지원이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 기획했던 규제프리존은 27개 전략산업에 한정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규제자유특구는 대상사업에 제한이 없고 규제샌드박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 제도와 규제자유특구의 차이점〉

		타 제도	규제자유특구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	규제 완화	기술중심 개별규제 완화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규제 재정 및 세제 지원
	신청	기업	시·도지사
	대상	전국	비수도권
	위원장	소관부처 장관	국무총리
규제 프리존	대상 산업	전략산업(27개) 한정	제한 없음 (혁신성장사업 + 지역전략산업)
	규제 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심	규제샌드박스 중심 + 메뉴판식 규제특례

◎ 해외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영국은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로서, 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로 선언한 후 2014년 10월 금융감독청(FCA)이 중심이 되어 핀테크 분야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기업 간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테스트를 마친 기업의 90%는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1차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온 기업들 중 40%가 투자 받는데 성공하였다.

싱가포르는 2016년 6월 핀테크 부문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 중심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평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일본은 규제샌드박스를 국가전략에 반영한 경우로서 국가전략특구법 개정(2017.3.)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2017년 6월 '미래투자전략 2017'의 발표와 '슈퍼 스마트 사회(Society 5.0)'의 제시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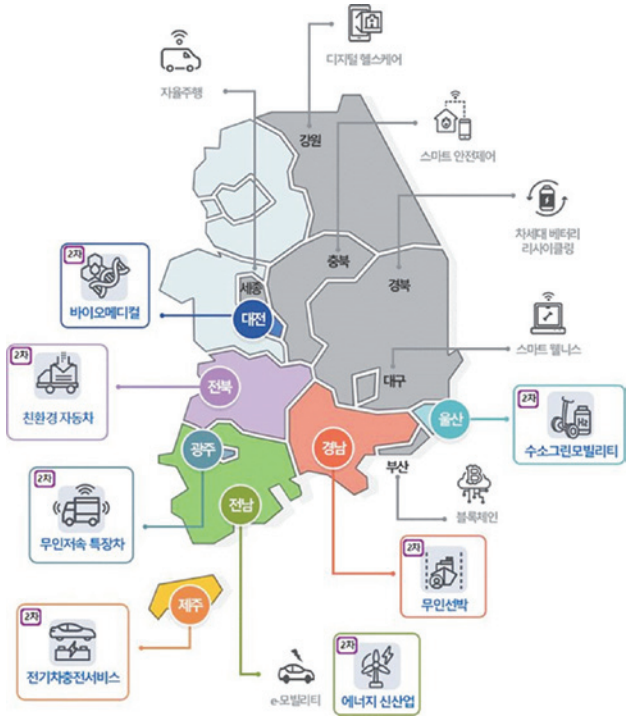
◎ 지정현황

정부는 2019년 7월 24일 국내에서 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발표하였다. 당시 선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에 근거하여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 지역주도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규제샌드박스 발굴,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신산업 육성의 기반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과정에서는 특구 사업(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지역 특성·여건의 적합성, 지자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구 사업과의 연관성, 특구 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 특구 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그리고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 등이 고려되었다.

제1차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으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규제특례 49개와 메뉴판식 규제 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되어 기업들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갖게 되었고, 7개 특구에서 향후 4~5년 기간에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후 2019년 11월 12일에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다.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6개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유발 2,200명, 140개사의 기업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분야 등 4개 사업에 총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등 15개 지역 115.67km²에 지정되어 있다.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2,263백만원(국비 10,418백만원, 시비 4,471백만원, 민자 7,374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왜 블록체인인가?

블록체인을 간단히 말하면 '일정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때 데이터는 주로 거래 기록이 담긴 장부(원장, Ledger)를 말하는데, 이 장부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들이 복사하여 나누어 가지고, 공동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라고도 부른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2025년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IT기술 전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블록체인의 부가가치가 2017년 40억 달러에서 2025년엔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분야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초연결, 초지능, 초현실감, 초신뢰의 시대라고 할 때, 초신뢰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또한 단순한 요소기술이 아닌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유발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기술이다. 기존의 규칙 체계와 경쟁하거나 새로운 규칙 체계를 실현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금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부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정의
물류	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생산지의 농축산물을 소비자(학교, 병원, 선박 등)까지 콜드 체인 기술 이용, 신선상태로 유통 및 이력관리 →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신선도 유지, 유통기간 단축 등 미래형 물류 체계 구축 ※(실증특례) 화물자동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관광	②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이용객이 앱을 통해 입장권, 숙박, 렌트카 등 관광패키지 티켓 구매, 관광객·가맹점 등과 데이터(=분산 원장) 공유 → 실시간 결제·정산과 소비패턴 분석(위치, 연령 등)으로 관광상품 개발, 이용객 보상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실증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공공안전	③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CCTV와 시민제보 기반의 앱을 통하여 수집된 위치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유관기관(경찰, 소방)에 제공 → 즉각적 재난 및 사고 상황 대처, 제보자 보상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실현 ※ (실증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금융	④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지역강점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 연결, 디지털 바우처 발행·유통 → 사회적 가치(재능기부, 봉사 등), 경제적 가치(보상, 환전, 충전, 정산 등) 창출,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 구축 ※(실증특례) 전자금융거래법



〈부산 규제자유특구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기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갈 핵심 기술로써 최근 사회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한 번 기록된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여러 사회적, 윤리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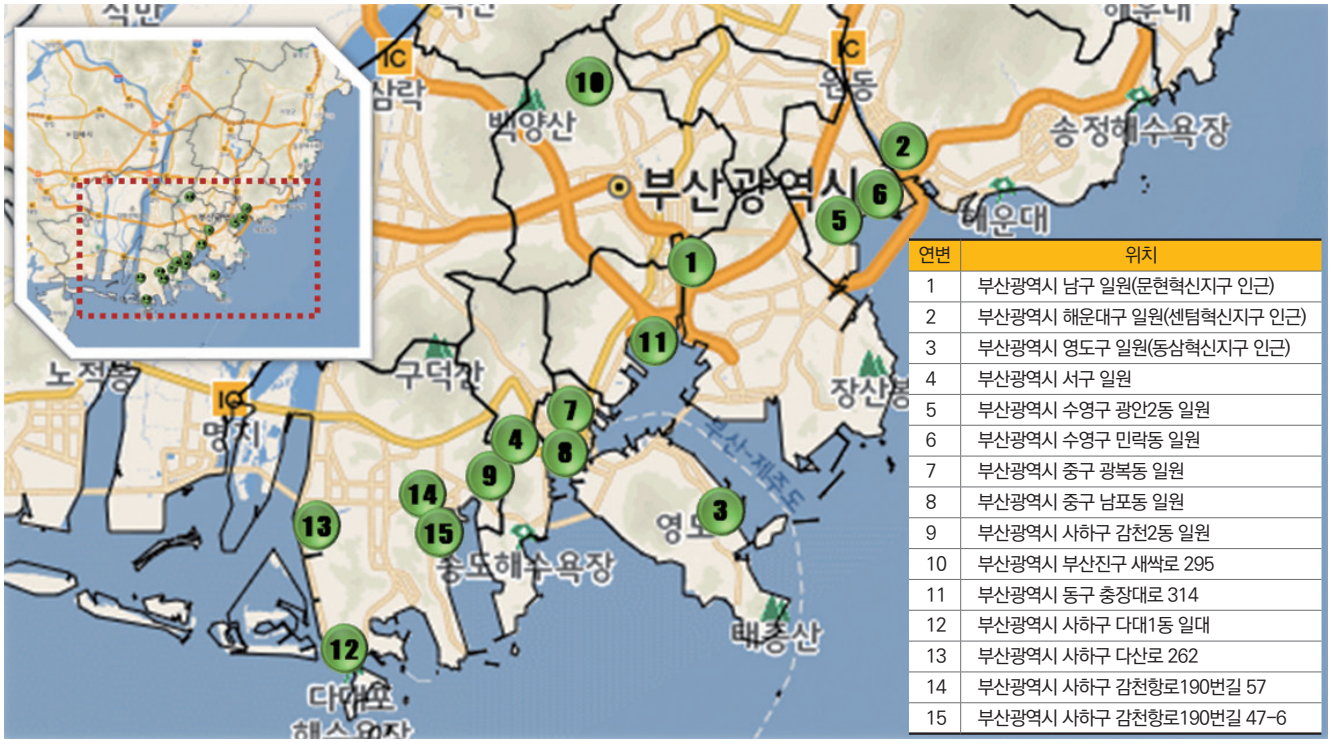
현재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추가사업 발굴, 국가 시범사업 연계 및 참여, 블록체인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대해본다.



〈블록체인이 부산에 적합한 이유〉

참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블록체인의 미래」
대한상공회의소, 2017,「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
부산광역시(스마트시티추진과) 내부자료
산업연구원, 2019,「규제자유특구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연변	위치
1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문현혁신지구 인근)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센텀혁신지구 인근)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동삼혁신지구 인근)
4	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7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일원
8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11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일대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57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스마트챌린지 사업

최신의 도시정책 및 이슈 등을 소개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스마트챌린지 사업이란?

●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과 신규 공모사업을 통합 개편 후 2020년부터 새롭게 출범한 사업

● (대)시티 – (중)타운 – (소)솔루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규모·사업 범위 등을 차별화하여 추진

개편방향



〈스마트챌린지 개편방향〉

◎ 사업의 종류

■ (대규모) 시티 챌린지

▶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예) 도시전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모든 이동 과정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

▶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하여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15억 원/곳)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 원(지방비 50% 매칭)의 본사업을 지원

▶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제도('20.2.27 시행)로, 시티챌린지 추진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일괄 해소

■ (중규모) 타운 챌린지

▶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솔루션 구축 (예) 공업단지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 구역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구축

▶ 이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되며, 1년차에 4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3억 원/곳)을 지원하고,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 원(지방비 매칭 50%)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

▶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 타운 챌린지는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 (소규모) 솔루션 챌린지

▶ 솔루션 챌린지는 대·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

▶ 이 사업은 시티·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 원(지방비 50% 매칭)을 투입하고,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도록 지원

2020 스마트챌린지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종류〉

◎ 수영 스마트 ECT(Eco Cul-Tourism) - 타운챌린지

■ 사업개요

▶ 위　치 :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 면　적 : 1,242,000㎡

▶ 유　형 : 문화관광 특화형

▶ 사 업 비: 49.95억 원

▶ 사업내용

기존 해수욕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더 편리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과 주민·지역상인이 공존·공생·공감하는 스마트 해양관광산업단지로서 Suyeong Smart ECT 특화단지 계획



〈위치도〉

■ 세부사업내용

① 스마트시티 플랫폼

▶ 도시상황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 다양한 융복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처리, 관리·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축

② 유동인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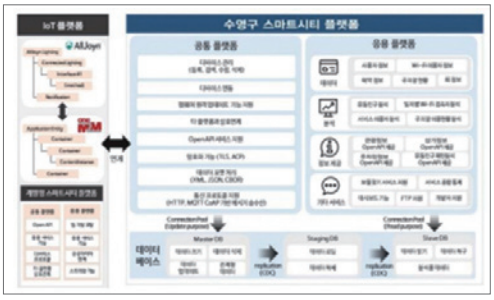
▶ 공공와이파이 기반으로 대상지역내 체류인구, 유동인구, 재방문, 관심지역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시스템 도입

③ VR/AR 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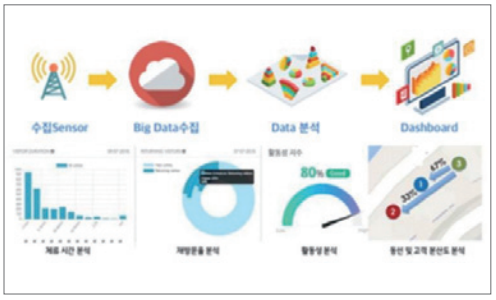
▶ 광안리 및 주요 관광명소를 주제로 해양레저에 특화된 VR/AR 체험 콘텐츠 제공

④ 스마트미디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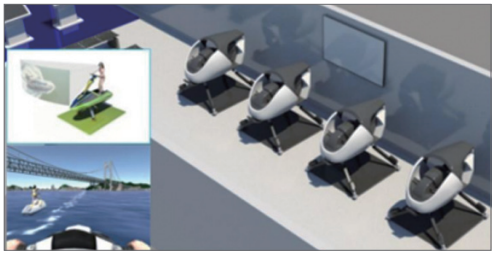
▶ 민락회타운에서 취급하고 있는 활어, 어패류의 구분, 계절별 즐길 수 있는 회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스마트 횟집거리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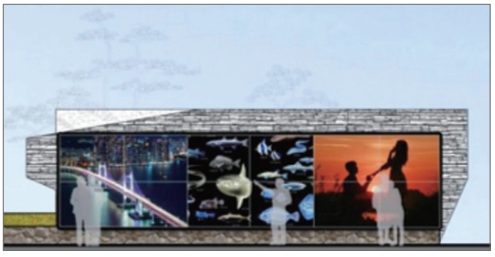
〈스마트시티 플랫폼〉



〈유동인구 분석〉



〈VR/AR 체험관〉



〈스마트미디어월〉

⑤ AR 기반모바일 서비스

▶ 상가정보서비스

- 빙천동, 민락회타운, 카페거리, 불고기거리, 로컬푸드 등 다양한 먹거리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상점 위치, 이동경로, 메뉴, 요금, 가능 인원, 주차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 및 효율성 증대

▶ 길안내서비스

- 주행자나 관광객이 목적지를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AR기술(스마트폰 카메라와 GPS 정보 이용)을 적용한 보행자 네비게이션 형태의 정보 제공
- 상가정보서비스 및 스마트방향표지판과 연계

▶ 보물찾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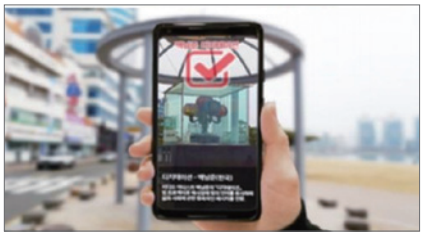
- 주요 관광명소 및 조형물 등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미션 수행형태 콘텐츠
- 바다빛미술관 작품, 조형물, 버스킹, 상가 등과 연계하여 구현
- 이벤트 미션수행을 통해 리워크 쿠폰 제공



〈상가정보서비스〉



〈길안내서비스〉



〈보물찾기서비스〉

⑥ 주차정보서비스

▶ 대상지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나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므로 이용가능 주차면수, 요금, 위치 등을 플랫폼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제공

⑦ 스마트벤치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광안리 해변의 갈대파라솔 벤치를 활용하여 스마트기기 충전, 관광정보 제공 패널, 가로등이 설치된 스마트 벤치로 조성하여 편의 증진

⑧ 스마트방향표지판

▶ 회전하는 표지판을 통해 초행자 및 외국인에게 원하는 목적지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 설치

⑨ 스마트횡단보도

▶ 보행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감응식 횡단보도 설치



〈주차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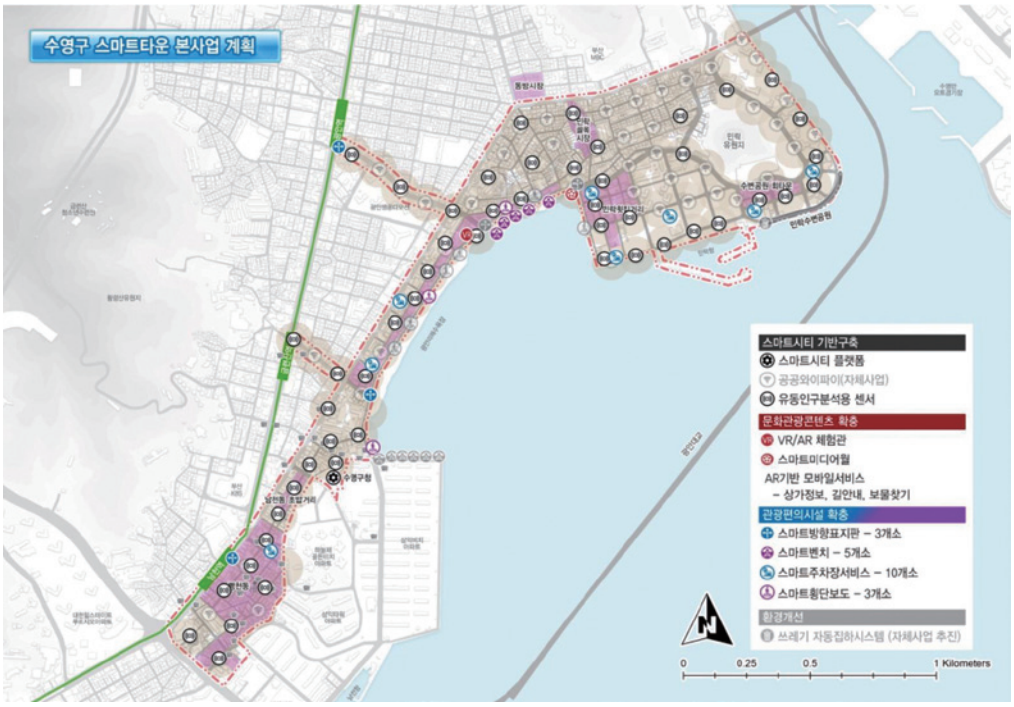
〈스마트벤치〉



〈스마트방향표지판〉



〈스마트횡단보도〉



〈수영구 스마트타운 본사업 계획 총괄도〉

참고자료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https://smartcity.go.kr/

토지은행(Landbank)제도

도시계획에 대하여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용어에 대하여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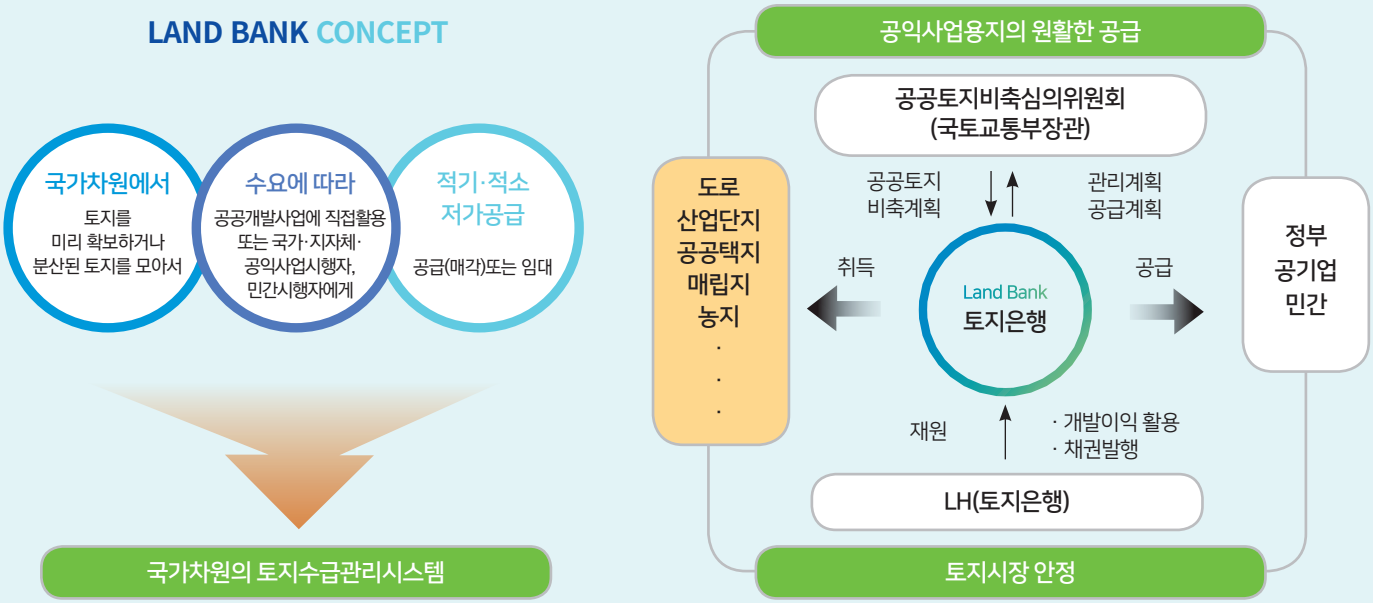


토지은행제도

도시계획시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산업용지, 공공주택의 수급조절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장래에 이용하거나 개발용지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 및 활용 가능하도록 토지를 비축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 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2009. 2. 6. 제정 및 시행되어 토지은행이 2009. 7. 1.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 토지은행의 개념 및 운영체계



〈토지은행의 개념 및 운영체계〉

■ 비축대상 및 토지 취득방법

비축목적에 따라 비축대상 토지(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를 구분하여 협의, 수용, 매수청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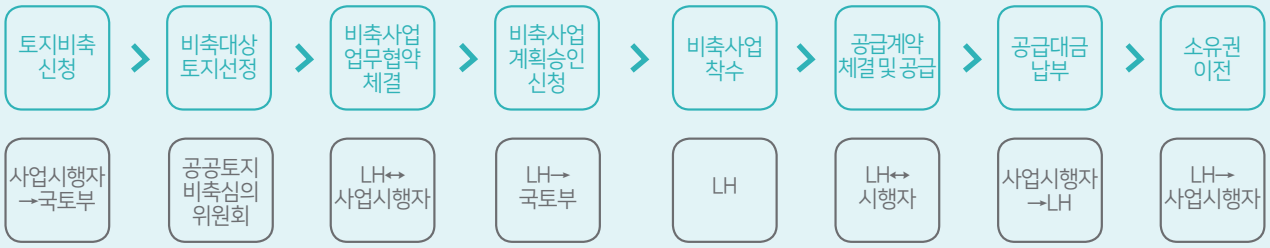
〈공공개발용 토지와 수급조절용 토지〉

구 분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
정 의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
비축대상	공익사업용지*(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 등)	일반토지, 개발가능토지 등
취득방법	협의, 수용 등	협의 선매 등

※ 공익사업용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신청 절차

공공토지 비축사업대상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토지의 비축·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토지은행이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신청 절차〉

■ 공공토지 비축사업 목록('19. 12. 기준)

〈전국 공공토지 비축사업 현황〉

구 분	사업명칭	비축 승인 내용		사업명칭	비축 승인 내용	
		사업기간	면적(천㎡)		사업기간	면적(천㎡)
도로 – 국도, 국지도 – (24)	신갈우회	'09.8.~'19.4.	239	적성–전곡	'09.8. ~ '17.2.	1,589
	음봉–영인	'09.8.~'17.3.	121	무계–삼계	'09.9. ~ '24.12.	244
	배방–탕정	'09.8.~'13.12.	87	부산시계–웅상1	'10.11. ~ '18.12.	434
	음암–성연	'09.8.~'17.12.	56	부산시계–웅상2	'10.11. ~ '15.1.	250
	퇴계원–진접	'09.7.~'16.12.	314	장안–온산1	'10.11. ~ '17.12.	494
	분천–송산	'09.8.~'15.12.	99	장안–온산2	'10.11. ~ '18.12.	425
	영인–팽성	'09.11.~'16.12.	563	덕양–용미	'10.12. ~ '15.12.	118
	연천–신탄리1	'09.7.~'13.12.	152	조리–법원	'10.12. ~ '18.10.	726
	장흥송추우회	'09.8.~'15.12.	230	웅상–무거1	'13.11. ~ '19.6.	297
	마산–신읍	'09.8.~'14.12.	92	웅상–무거2	'13.11. ~ '19.6.	378
	대산–석문	'09.8.~'16.1.	103	부적–금구	'17.3.~'21.11.	27
	석문–가곡	'09.8.~'17.9.	124	광명–화천	'19.6.~'24.1.	30
문화재 등 (3)	사비왕궁	'19.1.~'21.12.	141	산촌광장	'19.12.~'20.12.	10
	황성공원	'19.12.~'23.6.	97			
산업단지(5) 및 공공주택(1)	장항국가생태	'09.1.~'18.12.	2,751	포항블루밸리	'09.9. ~ '19.12.	6,119
	광주 빛그린	'09.9.~'18.12.	4,072	국가식품클러스터	'12.6. ~ '16.12.	2,326
	대구국가산단	'09.9.~'18.12.	6,416	의왕고천(공동주택)	'17.3.~'20.12.	205
공공토지 비축사업 33개소 사업면적 29,329천㎡						

※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는 '17.12월 준공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토지은행 홈페이지, www.landbank.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법령 제·개정 소식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대한 제정 및 개정사항을 알려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2. 4.
[시행] 2020. 2. 4.

○ 공원시설에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등을 추가하고, 공원의 종류에 방재공원을 신설하여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였다.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효 기간(2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공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공원 내 설치 가능 시설 추가 및 도시공원 종류 신설 (제2조제4호, 제15조제1항) |

●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에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을 추가하고,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재공원을 신설하였다.

| 도시공원의 확보를 위한 결정 효력 상실기한 연장(제17조) |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도시공원의 결정 고시일부터 30년까지 사업시행 기간을 유예하였고,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0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결정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2020. 2. 18.
[시행] 2020. 2. 2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수탁기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절차 간소화(제19조제9호) |

●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그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 추가(제23조제1항제6호) |

●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재축·개축·대수선 및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수탁기관(제24조의2)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별표 1 제2호자목마) 신설, 별표 1 제2호타목 |

●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및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 설치하는 열수송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설치 요건 완화[별표 1 제3호러목가), 같은 표 제5호마목4) 및 같은 목 10)] |

●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에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부지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함.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종전에는 지역조합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품목조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되, 품목조합은 임야가 아닌 곳에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요건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같은 호 라목다)] |

●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해당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해당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일자	심의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제1회 도시계획 위원회 (2020.1.29.)	① 202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안) [강서구 화전동 산74번지 일원] A=50,140㎡	•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연면적 결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② 도시관리계획(시설:용소웰빙공원) 결정(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23-5번지 일원] A=78,950㎡	• 2008년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용공간으로 조성 완료된 용소골저수지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③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신설)(안) [해운대구 우동 142-7번지 일원] A(완충녹지)=56,096㎡ → 54,468㎡ (감 1,628㎡) A(경관녹지)=1,633㎡ (증 1,633㎡)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인가조건 반영에 따라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산책로 등과 연계하여 주민편의시설(휴식공간) 설치가 가능한 경관녹지로 결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제2회 도시계획 위원회 (2020.2.27.)	① 도시관리계획(시설:중앙공원) 결정(변경)(안)_재심의 [엄광산 일원(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일원] A=5,020,657㎡ → 3,520,556.6 (감 1,500,100.4)	•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2019.11.6.)에서 재심의 되었던 안건으로 검토결과에 따라 중앙공원을 변경하고자 함 • 중앙공원(근린공원) 결정(변경)A=5,020,657㎡ ⇒ 3,520,556.6㎡(감 1,500,100.4)	원안가결
	② 괴정6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 A=31,489.6㎡	• 괴정6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재심의
	③ 하단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하단동 605-31번지 일원] A=15,462.3㎡	• 하단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재심의
	④ 남천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수영구 남천동 228번지 일원] A=49,252㎡	•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정비사업의 해제요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하고자 함	원안가결
	⑤ 연산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연제구 연산3동 1811번지 일원] A=70,602.1㎡	•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정비사업의 해제요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하고자 함	원안가결

BUSAN U² vol. 27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대표전화 : 051-888-2475